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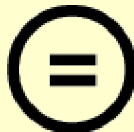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치학 석사 학위논문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



2012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정 치 외 교 학 과

구 단

정치학석사 학위논문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

지도교수 이 성 봉

이 논문을 정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정 치 외 교 학 과

구 단

구단의 정치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8월 24일



주 심 정치학박사 이 대 희 (인)

위 원 정치학박사 이 정 호 (인)

위 원 정치학박사 이 성 봉 (인)

목 차

I .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기존 연구 검토	3
3. 연구 범위와 방법	7
II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8
1. 중국의 대외 정책	8
1) 중국의 대외인식	8
2) 중국의 대외정책	11
2.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15
1)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16
2) 한반도 비핵화	17
3)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18
3. 중국의 대 북한 정책	23
1) 북한체제의 안정 유지	23
2) 북한 핵문제 해결	24
3)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26
4) 중국식의 개혁개방 희망 및 유도	27
III. 제1차 북한 핵 위기 시 중국의 대응	29
1. 제1차 북한 핵 위기 발생 과정	29
2. 제1차 북한 핵 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	33
3. 제1차 북한 핵 위기에 대한 중국의 정책 결정 요인	37
IV. 제2차 북한 핵 위기 시 중국의 대응	37
1. 제2차 북한 핵 위기 발생 과정	37
2. 제2차 북한 핵 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	39
3. 제2차 북한 핵 위기에 대한 중국의 정책 결정 요인	46
VI. 결론	48
참고 문헌	52

<국 문 초 록>

본 논문의 목적은 제1차 북한 핵 위기와 제2차 북한 핵 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비교함으로써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특히 제2차 북한 핵 위기 이후부터 후진타오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중국의 대북정책을 전망하고자 한다. 즉, “중국은 제1차와 제2차 북한 핵 위기시 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북한 핵에 대한 중국의 대북정책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의 핵심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1차와 제2차 핵 위기에서 중국의 대내외 요인과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2차 북한 핵 위기에 대해 중국은 종전의 방관적 태도를 고쳐 적극적 개입의 자세로 나왔다. 이에 대한 중국의 변화의 배경에는 다극화 경향이 지배적으로 등장하는 시대로 탈냉전시대가 향하고 있다는 중국의 진단이 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진단으로 비춰본 한반도 정책은 남북한 간의 등거리 실리 정책, 그리고 실용적인 북·중 관계 수립의 모습으로 투영된다. 또한 실리외교에도 의지를 굳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목표는 자국 경제를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함이고, 주변국의 적지 않은 수가 핵 보유국인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비핵화를 유지하기 위함이며, 한반도에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중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북한 체제를 안정시키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면서 이 영향력을 통해 중국식의 개혁과 개방을 희망하고 유도하기 위한 대북정책을 계속 하고 있다. 제1차 북한 핵 위기시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에는 찬성하였으나,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 이 배경에는 도광양희의 정책을 견지하고 유소작위의 대상이 주로 국내문제였으며 주요 정책 목표가 국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반면 제네바 협의가 파기된 제2차 북한 핵 위기에는 ‘내정불간섭’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이른다. 이는 중국 국내외적으로 북한에 대한 배반과 배신의 감정이 여론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이 중국의 핵심안보 이익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후로도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전제하에 한반도 비핵화 목표도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Abstract>

The goal of this thesis is to research the changes on policies of China toward Nuclear crisis of North Korea by comparing the reaction made by China toward the first nuclear crisis with the one toward the second nuclear crisis. Especially I would like to focus on the changes on policies of Hu Jintao government toward North Korea after the second nuclear crisis of North Korea, and by using this data to prospect further policies on North Korea which means that I want to predict the policies on North Korea by analyzing the reason why China took different attitude in the first and second nuclear crisis. We should have understanding on domestic and foreign factors, and background in the first and second nuclear crisis in order to apprehend the main factor on changes on policies. Concerning the second nuclear crisis of North Korea, China has changed its attitude of an onlooker, and assumes an active attitude. The diagnosis made by China which this post-Cold War era heads for a multipolar world plays a role on the background of this change. This diagnosis is reflected on equidistance diplomac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establishment of pragmatic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lso, China hardens its purpose on pragmatic diplomacy to improve relations with South Korea. The object of these diplomatic policies lies o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 Peninsula for its own economy, upholding denucleariz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nsifying its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China has stabilized the system of North Korea, resolved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and maintained exerted its influence on North Korea until now since early 1980's. And by wielding this influence, it continuously implements its policies on North Korea to induce Chinese-style reform and opening. When the first nuclear crisis occurred, China agreed on the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ut oppose to putting pressure on North Korea. That's because China's main goal of policies lies on settle domestic problems. On the other hand, when the Geneva Conventions was abrogated, the second nuclear crisis, China did not adhere to 'non-intervention' policy, exerted pressure and intervened aggressively on North Korea. It showed that public opinion of China started to feel betrayed by North Korea and China tried to dispel the emergency of 'the responsibility of China'. From now on, China will continue its effort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and stick to its goal of denuclearization on the premise that Peace and stability are kept on the Korean Peninsula.

I. 서론

1. 연구 목적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제1차 북한 핵 위기¹⁾와 제2차 북한 핵 위기²⁾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비교함으로써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 변화와 그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특히 제2차 북한 핵 위기 이후부터 후진타오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중국의 대북정책을 전망하고자 한다. 즉, "중국은 제1·2차 북한 핵 위기 시 왜 다른 태도를 보여 주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북한 핵에 대한 중국의 대북정책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의 핵심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1·제2차 북한 핵 위기에서 중국의 대내·외적 요인과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 핵문제는 한국, 중국과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중국에게는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바라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한 한반도 및 동북아의 불안정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³⁾

사실 제2차 북한 핵 위기 발발 이전 중국은 우방국인 북한의 외교정책에 대해 반대한 적이 없었다. 중국은 북한이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며 발발한 '제1차 북한 핵 위기' 이후 계속 '북한 핵문제는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과 한국 삼자간의 현안이니 북한과 이 삼자간의 직접 대화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⁴⁾고 주장해 왔으나 제2차 북한 핵 위기 이후 북한에 대한 정책 변화를 표면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제1

1) 본 논문에서는 1993년 3월 12일에 북한의 NPT 탈퇴선언 후부터 1994년 11월 4일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발표까지 제1차 북한 핵 위기로 설정한다.

2) 본 논문에서는 2002년 북한의 핵개발 시인으로 야기된 북한 핵문제를 제2차 북한 핵 위기의 시작으로 설정한다.

3) 이계란, "후진타오 정부의 대북정책: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제4호 2010, p. 146.

4) 何洪澤 “安理會通過八二五號決議 要求朝重新考慮退出不擴散覈條約決定,” 『人民日報』 (1993.5.13.)

孫茹, 『朝覈問題地區部作進程研究』 (北京: 時事齣版社, 2009), p. 45.

차 북한 핵 위기 시 당사자들간 해결과 정세의 발전을 관망하는 기존의 입장과 태도에서 벗어나 북한 핵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관련된 이해 당사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로 선회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James Kelly) 미국 대통령 특사가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의 고위인사로부터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제2차 북한 핵 위기가 발발했다. 제2차 북한 핵 위기⁵⁾를 거치면서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 주변 6개 국가의 중요한 외교 현안이 되었고, 중국은 양자외교를 선호했던 이전의 정책과 달리 6자회담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이것은 제2차 북한 핵 위기가 한반도 이익에 얽혀 있는 이해 당사자국들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촉구하도록 하였고,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이 중국의 외교안보 이익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다자외교와 양자외교를 병행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이처럼 제2차 북한 핵 위기 이후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한편, 동시에 북한은 정치·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과 북한의 의도는 상호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했고, 2002년 10월 이후 중국과 북한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협력을 실무차원에서 시작하여 양국의 협력채널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제2차 북한 핵 위기 발생 이후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2003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총 6차례에 걸쳐 6자회담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6년 7월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와 10월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행위를 '제멋대로(悍然)'⁶⁾라고 표현하며, 북한 핵개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UN안보리에서

5)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9), p. 191.

6) "2006年10月10日外交部發言人劉建超在例行記者會上答記者問"

http://www.fmprc.gov.cn/chn/pds/gjhdq/gj/yz/1206_7/fyrygth/t275579.htm(검색일: 2012.4.28)

대북제재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 당사국들의 공동 노력으로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및 '10.3 합의', 2008년 6월 영변 원자로 냉각탑 해체, 동년 10월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일정한 성과와 진전을 이루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2008년 12월 이후 6자회담은 중단되었고, 북한은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안보리 '1874호' 결의에 반발하여 6자회담 참여를 거부하였다. 2009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은하2호) 발사와 5월의 제2차 핵실험 강행, 지난 4월 달에 진행되었던 장거리 로켓발사(광명선3호) 그리고 계속해서 나온 북한 3차 핵실험설 등 한반도는 또다시 극도의 긴장상태로 치닫고 있다.⁷⁾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 핵문제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있어 어려운 외교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핵개발은 단순한 대미협상용 카드가 아니며, 북한이 지속적인 핵개발을 통하여 핵보유국이 될 경우 중국의 안보이익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정책이 바뀌었다'는 가설을 설정하여 제1·2차 북한 핵 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비교함으로써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그 요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향후 중국의 정책을 전망하고자 한다.

2. 기존 연구 검토

1980년대 말 이전 중국 베이징에서 한반도에 관한 연구는 주요 대학교에서 이루어졌었고 연구 분야도 역사, 언어와 문학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한반도의 정치, 외교 등은 비교적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으며 한·중 수교 이후에 학계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성과 등 중국이 배울만한 점에 관한 연구 위주로 진행되었다. 반면, 북한 관련 연구는 제2차 북한 핵 위기가 시작되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7) 이계란, "후진타오 정부의 대북정책: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제4호 2010, p. 146.

하고 제1·2차 북한 핵 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비교함으로써 북한 핵 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여 그 변화 요인을 연구하는 논문은 아직까지 없다.⁸⁾ 다만, 제1·2차 북한 핵 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존 연구가 일부 존재하며, 논문을 전개하는데 있어 이러한 중국과 한국의 기존 연구자료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중국의 연구자료 중 북한 핵과 관련이 있는 문헌으로는 楚樹龍, 金威의 『中國外交戰略和政策』, 劉長敏의 『論朝鮮核問題解決中的國際斡旋與調停』, 孫茹의 『朝核問題地區合作進程研究』, 陳峰君, 王傳劍의 『亞太大國與朝鮮半島』등이 북한 핵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

한국의 연구 자료로는 강택구의 『국제지역 연구』에서 발표한 “제2차 북한 핵 위기 이후 중국의 대북 정책: 압박과 딜레마”, 文興鎬의 『中蘇研究』에서 발표한 “北韓 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基本 認識과 政策 基調”, 박병광의 『통일정책연구』에서 발표한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북한 핵 인식: 제1·2차 핵실험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金基正 羅雄廈가 『中蘇研究』에서 발표한 “관망과 개입: 제1·2차 북한 핵 위기에 나타난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요인 분석”, 리단, 전형권이 『한국동북아논총』에서 발표한 “중국의 북한 핵 위기 관리와 한반도 비핵화”, 양순창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이동률·동덕여대의 『세계지역연구 논총』에서 발표한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2010년 이후 김정일의 중국방문 결과를 중심으로”, 전병곤의 “중국의 북한 핵 해결 정책과 대북 영향력 평가”, 이계란이 『한국과 국제정치』에서 발표한 “후진타오 정부의 대북정책: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신상진이 『북한연구학회보』에서 발표한 “후진타오 집권 초기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요인 분석”, 오수열이 『기획논문』에서 발표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중국의 태도” 등이 있다. 북한 핵문제를 다룬 한국 책은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진영의 『21세기 중국의 외교정책』, 김재철 교수의 『중국의 외교정책과 국제질서』, 한석희의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 대외관계』 등이 있다.

8) 樸鍵一·馬軍偉, 『中國對朝鮮半島的研究』(北京: 民族齣版社, 2006), p. 40.

린리민(林利民)은 제1·2차 북한 핵 위기에서 중국의 정책변화 요인을 세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중국과 한반도의 특수한 역사와 감정관계 때문에 중국이 북한 핵문제를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북한 핵 위기가 중국의 경제이익, 무역이익, 정치이익, 안전정책 이익 등을 포함한 국가이익에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고, 셋째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에게 국제적인 책임을 행사하라는 촉구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한 薑宅九, 時慤弘, 硃鋒 등 중국학자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 가능성과 북한의 모험행위는 중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제1차 북한 핵 위기와는 달리 제2차 북한 핵 위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것이라 본다. 즉, 제1차 북한 핵 위기 시에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부족하여 중국은 북한 핵문제에 개입하지 못했으나 제2차 북한 핵 위기 이후 북·중관계가 어느 정도 복원되었으며 이라크 전쟁을 본 북한이 미국의 위협과 경제제재 하에서 생존하려면 중국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다고 인식하게 되어 중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더 큰 여지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이런 요소들은 중국의 정책 변화의 배경으로 볼 수 있지만 정책 변화 요인으로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서진영은 과거 북한 핵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중국은 이제 설득과 압력을 병행하는 수단을 써가면서까지 북한 핵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변화가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에서도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행동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는 대국외교의 반영이라고 주장한다.

김재철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중국의 전체적인 외교정책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중국의 외교정책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중국의 대외적 적극성은 한반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증거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반응적 성

격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한석희는 제1차 핵 위기와 제2차 핵 위기 사이 10년 동안 중국의 대·내외적 상황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고,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중국 내에서도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시도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대·내외적 상황변화가 중국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의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대내적 요인의 핵심은 중국 지도부의 변화와 이들이 제시한 새로운 정책, 도광양회에서 화평발전 정책으로의 전환이 있으며, 대외적 요인으로는 중·미관계의 개선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 우려 등이 존재한다.

이들의 주장을 분석해보면 우선 린리민과 서진영의 분석이 전면적이기는 하지만 설득력이 없는 듯하다. 린리민의 분석대로라면 중·북의 우호 감정 때문에 중국이 북한 핵문제에 적극 개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따르면 중·북우호 관계가 제2차 북한 핵 위기 시만 나타나고 제1차 북한 핵 위기 시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모순이 존재한다. 또한 린리민과 서진영은 중국이 책임대국 추구 때문에 북한 핵문제에 개입했다고 한다. 그러나 제2차 북한 핵 위기 초기만 해도 중국은 북한 핵문제가 북·미 현안이라고 주장하려 들었다. 제2차 북한 핵 위기 초기에 왜 책임대국으로써 책임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왜 북한이 NPT탈퇴 이후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겨난다. 한석희는 중국의 10년 동안의 국력신장이 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태도 전환의 원인으로 보고 있으나 핵심 요인으로 보기는 힘들다.

제2차 북한 핵 위기에서 제1차와 달리 중국의 대북한 핵 정책이 변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책전환의 요인에 대해서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중국과 한국의 학자들이 자기만의 견해를 발표하고 있다. 정책 변동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들을 총괄하면 주로 중국의 경제성장에 의한 국력신장, 국가이미지 제고, 후진타오 정부의 출범, 미국의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 우려, 중·북관계 복원, 중·미관계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제2차 북한 핵 위기 시 중국의 대내·외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북한 핵 위기가 군사 충돌로 치달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 및 북한 핵보유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의 안보이익에 끼치는 심각한 위협을 중국이 인식하게 됨으로써 북한 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서게 된 것이다. 즉, 경제발전에 의한 국력신장, 중·미관계 개선, 중·북관계 복원 등 대내·외 환경이 좋은 배경 하에서 북한 핵개발은 중국의 핵심이익에 위협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중국이 북한 핵문제에 적극 개입하게 된 것이다.

3. 연구 범위와 방법

본 논문의 시간적 연구범위는 한국과 중국이 국교정상화를 맺은 1992년부터 시작하는데 한·중 수교는 시기적으로 제1차 북한 핵 위기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한·중수교는 북한에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다 주었고 북·중 관계는 한동안 '냉담기'를 겪었다. 한·중 수교 이후부터 제2차 북한 핵 위기 발발 이전까지 북·중 양국사이에 정치적인 왕래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중국은 북·중 관계를 복원하려고 계속 노력해왔다.⁹⁾ 이러한 결과로 제2차 북한 핵 위기 이후 중국이 북한 핵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중 협력이 과거에 비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점진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중국의 대외정책부터 제1·2차 북한 핵 위기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 비교 및 그 원인 분석까지 점진적으로 접근하여 중국의 북한 핵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중국은 대외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대한반도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대북정책 변화를 분석하려면 대외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2차 북한 핵 위기를 계기로 중국의 대북 정책은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고 변화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국의 한반도 정책 목표, 대북 정책 기조를 포괄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제1·2차 북한 핵 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였다. 북한의 제2차 핵 위기 발생 시간과 후진타오 정부 출범시간과 우연히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제2차 북한 핵 위기 후의 대북정책은 후진타오 정부의 대북정책을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9) 陳峰君·王傳劍, 『亞太大國與朝鮮半島』(北京: 北京大學齣版社, 2004), p. 333.

이외에도 제1·2차 북한 핵 위기를 둘러싸며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 중국 지도자와 외교부 발언, 북한 핵 대응에 대한 역사적 사실 및 제2차 북한 핵 위기 이후 중국의 정책변화와 관련하여 기존에 연구되어 있는 중국과 한국 학계의 연구 성과를 분석하여 참고하였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하였고,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기존연구 검토와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기술하였으며 2장에서는 중국의 대외정책부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중국의 대북 정책 기초를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제1차 북한 핵 위기의 발발과 중국의 대응 및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4장에서는 제2차 북한 핵 위기 이후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어떤 대북 정책을 취했는지와 어떤 정책변화가 생겼는지 또한 정책 변화의 원인을 중점으로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 정책변화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대북 정책을 전망해 보았다.

II.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1. 중국의 대외 정책

1) 중국의 대외인식

중국은 일찍부터 세계가 글로벌화하는 추세를 보아왔으며, 글로벌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아래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탈냉전시대의 이상적인 국제체제로 다극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다극화를 실현하는 것이 중국 외교 목표중의 하나이다. 즉, 중국은 강대국간 일정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력이 공존하는 다극화를 추구함으로써 미국의 단극질서와 일방주의를 견제할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이 다극체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외교적 과제는 중국 스스로가 다극의 한극으로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극의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과 미국을 비롯한 다극 형성의 주체가 되어야 할 주요 대국들과 안정적 공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사회의 주요 강대국들, 특히 러시아, 프랑스 등과 다양한 형식의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동시에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구현하고 있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인접 국가들과도 경제외교를 전개하는 등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여 국제질서의 다극화라는 목표를 추구해가고 있다.¹⁰⁾

다극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외교대상은 사실상 미국이다. 미국은 중국의 다극화정책에 있어 극복의 대상인 동시에 협력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참여와 협력 없이는 다극화는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중국이 부상하는 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은 다극화 추진이 결코 반미 전선의 형성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대국으로서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노력이 결코 미국의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에 도전하거나 이익을 훼손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¹¹⁾ 이러한 세계다극화 체제의 인식하에 중국은 경제발전 우선의 목표를 수립하면서, 이른바 "주변국 우선, 강대국 관건, 개도국 기반, 다자협력을 중요 무대(週邊是首要, 大國是關鍵, 發展中國家是基礎, 多邊是重要舞臺)"로 하는 외교정책을 통해 대외정책을 구사함에 있어 대국외교를 항상 관건적 위치에 놓고 고려한다. 어찌 보면 주변국 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항상 우선적으로 그 국가들과 이해관계가 상호 얽혀 있는 기타 강대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다자주의를 바탕으로 국제정치경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자외교가 국제질서의 지구화, 다원화 발전 추세, 그리고 국가 간 이해관계가 날로 밀접해지고 교착되는 상황에서 평화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이다.¹²⁾ 1992년 등소평 남순강화(南巡講話)¹³⁾ 이후부터 1997년

10) 한국국제정치학회 중국분과, 『중국현대국제관계』 (서울: 도서출판오름, 2008), pp. 24~28.

11) 한국국제정치학회 중국분과, 『중국현대국제관계』 (서울: 도서출판오름, 2008), pp. 24~25.

12) 박동훈,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중한관계: 천안함 사건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제2호 2011년(여름) 통권 73호, pp. 123~124.

13) 1992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등소평(鄧小平, Dèng Xiǎopíng)이 상하이, 선전(深圳),

까지는 우선적으로 천안문 사건 직후의 국제적 고립으로부터의 탈피, 이미지 개선 그리고 개혁개방의 적극적인 재추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지원 획득 등이 중요한 시기로 다자외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국제경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인류보편의 가치규범과 관련된 기구, 예컨대 인권관련 국제기구 참여에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ARF(1994년) 등 역내 안보관련 다자기구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¹⁴⁾

그리고 1997년 이후부터 중국은 이른바 종합국력의 신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에서 보다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의 80%에 이르는 높은 참여도를 나타냈다. 이 시기 중국정부는 기본적으로 기존 국제체제가 제공하는 기회와 이익이 비용을 능가한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국제체제에의 참여는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책임대국론, 신안보관이 등장하면서 국제사회에 중국자신의 이미지, 규범과 규칙을 구체화하려는 시도도 나타났다. 특히 2001년 WTO 가입을 통해 국제화가 정점에 이르렀고, SCO, 6자회담, 보아오(博鰲)포럼, ASEAN과의 FTA 등 지역 다자주의에서는 주도국으로서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¹⁵⁾

다자주의에 대한 중국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중국정부의 공식문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 당국의 문건에서 다자외교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1986년 제6기 전국인대 4차 회의에서였다. 그리고 1989년 천안문 사건과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로 위축되었다가 남순강화 이후인 1993년에 다시 정부의 공식 문건에 등장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다자외교와 관련하여 단지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였던 반면에 1998년 9기 전국인대 제1차 회의 보고에서 처음으로 "건설적 역할의 발휘"라는 표현이 등장하여 그 이후 줄곧

주하이(珠海) 등 남방 경제특구를 순시하면서 더욱더 개혁과 개방을 확대할 것을 주장한 담화(談話).

14) 한국국제정치학회 중국분과, 위의 글, pp. 24~28.

15) 車秀法・王曉, 『등소평과 21세기 중국의 전략』 (서울: 유스북, 2005), pp. 445~447.

사용되었다. 그리고 2005년에는 "다자주의의 적극적인 주창"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중국의 다자외교의 목표가 적극적 참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¹⁶⁾

또한 중국은 1997년 신안보관, 책임대국론(負責任的大國)에 이어서, 2003년에 평화굴기(和平崛起), 2004년 평화발전(和平髮展), 그리고 2005년에 조화세계(和諧世界)등 보편적 가치관으로 포장된 중국이 지향하는 정체성과 규범을 국제사회에 연이어 제시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점차 국제체제의 주도국으로서 전환을 모색하려는 의지의 표현인 동시에, '중국은 평화적으로 국제사회에 책임지는 강대국으로 부상'하겠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¹⁷⁾

2) 중국의 대외정책

정치적 현실주의는 국제관계에서 외교정책의 일반원칙이며 모든 국가는 자국의 국가안보를 확보하고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체제 혹은 지역체제 내에서의 부단한 세력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제관계에서 정치적 현실주의는 구체적으로 세력균형정치로서 표출된다. 이러한 세력균형정치는 국제사회에서 새로이 부상하는 국가가 국제체제를 주도하지 못하도록 자국의 국력을 증강시키거나 동맹을 형성하여 균형을 모색하려는 끊임없는 외교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⁸⁾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국 정책결정자들은 현실주의적인 시각에서 국제환경을 인식하고 있다.¹⁹⁾ 그러나 이러한 중국 정책결정자들의 현실주의적인 국제 정세관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기존의 '전쟁불

16) 車秀法・王曉, 위의 글, pp. 444~448.

17) 한국국제정치학회 중국분과, 『중국현대국제관계』 (서울: 오름 도서출판, 2008), pp. 24~28.

18) 이호철, "탈냉전과 중국의 동북아 정책: 세력균형, 민족주의, 상호의존의 결합," 『국가정책』 5권 2호 (1999), p. 202.

19) 서진영, 『중국 대외관계 : 동북아 신질서와 중국』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0), pp. 22~23.

가피론'의 포기와 '혁명과 전쟁'이 아니라 국제관계의 핵심 의제인 '평화와 발전'이라는 국제정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획기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냉전종식 이후 중국은 안보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었다.²⁰⁾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소련의 붕괴로 인해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양극체제가 해체되었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국은 "평화와 발전은 현재 시대의 주요한 흐름이다(和平與發展是當今時代的主題)"²¹⁾라는 판단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하여 "독립, 자주, 평화"의 외교 정책을 견지하며 당시의 국제정세에 따라 "도광양회(韜光養晦)²²⁾, 유소작위(有所作為)²³⁾"의 정책 방침을 채택했다.²⁴⁾ "독립자주의 화평 외교정책"은 중국정부에서 1982년부터 현재까지 30여 년 동안 견지하는 외교정책과 정책이다. '도광양회, 유소작위'는 등소평의 20자 방침에서 나오는 말인데 주요내용은 냉정관찰(冷靜觀察),²⁵⁾ 온주진각(穩住陣腳)²⁶⁾, 침착응부(沉著應付)²⁷⁾ 도광양회(韜光養晦), 유소작위(有所作為)이다. 20자 방침의 주지는 도광양회, 유소작위²⁸⁾로서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채택한 대외정책으로 인심을 얻었다. 중국은 앞으로도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나서지 않을 것이고, 독립자주의 평화외

20) 양성저, "對東北亞安全問題的分析," 『國際問題研究』 1994년 제 5기, p. 2.

21) 江澤民, 『全麵建設小康社會, 開創中國特色社會主義新侖麵--在中國共產黨第十六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北京: 人民日報, 2002).

22) 도전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말은 적게 하고 일을 많이 하며, 나서지 않으면서 자기발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3) 국제문제에서 중국이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을 말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으로서

세계평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제문제에서 그만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24) 楚樹龍, 金威, 『中國外交戰略和政策』 (北京: 時事齣版社, 2008), p. 71.

25) 국제정세에 극심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지 않고 냉정에 냉정을 거듭하여

관찰하면 정세변화의 본질이 파악되고, 그에 대한 대응정책과 책략이 나오는 것을 말한다.

26) 압력을 무서워하지 않고, 고립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국가 주권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각변의 상황에서 태연하고, 자기 보조를 흐트리지 않음을 말한다.

27) 냉정한 관찰에 기초하여 실시구시적 정책과 책략을 채택, 복잡한 국제관계를 처리하고 각종 국제

문제를 해결함을 말한다.

28) 車秀法·王曉, 『등소평과 21세기 중국의 정책』 (서울: 유스북, 2005), pp. 445~447.

교정책을 계속해 세계의 모범이 될 것이다.”²⁹⁾ 라는 것을 의미한다. 도광양회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은 하는 것이며 중국의 최대 유소작위 대상은 중국 국내문제이다. 도광양회에 대해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몰래 기른다는 것인가, 강대해진 중국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품게 된다. 중국이 도광양회를 시작하던 1990년대는 공교롭게도 중국 위협론이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성행하던 시절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중국은 대외정책 방면에서 숨길 것이 없고, 도광양회를 장기정책 방침으로 간주할 필요도 없다.³⁰⁾

이렇게 중국은 30여년 동안 '독립자주, 평화발전, 도광양회, 유소작위'의 외교정책을 견지하며 발전해왔다. 이러한 외교정책은 표면적으로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세계정세와 중국의 국내 형세에 따라 많은 변화와 조정이 있었다. 특히, 중국공산당의 16대³¹⁾ 전후에 외교정책 정책 용어는 바뀌지 않았지만 정책사상, 내용, 목표, 심지어 가치관, 정서 등 비교적 큰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이런 요인들은 현재와 미래의 중국 외교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16대 회의에서 "중국의 외교정책의 핵심은 세계평화 유지, 공동발전 추진(中國外交政策的宗旨，是維護世界和平，促進共同發展)"³²⁾이라고 규명하였다. 이것은 16대 전에 열린 몇 차례의 당의 대표대회에서 나온 보고가 중국의 주요 외교 방침에 대한 논술보다 크게 발전하여 확대된 것이다.³³⁾

이러한 중국 외교발전 변화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외교에 체제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은 과거 국제체제 외에 있는 나라에서 현재 국제체제의 한 성원이 되었으니 역사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생겨났다. 둘째, 사상, 가치관을 포함한 중국의 외교정책 변화의 또 하나의

29) 車秀法·王曉, 위의 글, p. 446.

30) 車秀法·王曉, 위의 글, pp. 442~446.

31) 2002년 11월에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16회 전국대표대회

32) 江澤民『全面建设小康社会，开创中国特色社会主义新局面——在中国共产党第十六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北京：人民日报，2002)

33) 楚樹龍·金威，『中國外交戰略和政策』(北京：時事齣版社，2008)，p. 105.

원인은 중국 국력의 신장이다. 개혁과 개방 30년 이래 중국의 종합국력이 눈에 띄게 증강하여 중국인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었다. 셋째, 중국인들의 가치관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중국의 모든 정책의 핵심 목표가 국가 핵심이익을 수호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중국은 미국이 일으킨 각종 전쟁에 대해 계속 강력하게 반대해왔고 우방국인 북한의 모든 정책에 반대를 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국제문제에 대한 관점이 점점 변해가고 있다. 우선, 2003년의 이라크 전쟁에 대해 중국은 공식적으로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았다. 이라크 전쟁이 미국이 패권주의 정책을 펼친 결과이긴 하지만 사담은 정권을 잡은 20여 년 동안 이라크 국민들의 이익과 이웃나라의 안전, 심지어 중동지역의 안정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다. 이런 입장을 취한 것은 중국이 국제이익, 미국과의 이해관계에서만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국제정의(國際正義), 도덕 등에서 출발하여 중대한 국제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함을 보여주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도 중국의 국제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준다. 북한은 현재 중국의 유일한 정치동맹국이고 북·중친선 역시 오래되었다. 그래서 거의 반세기 동안 중국은 북한이 펼친 외교정책에 대해 여태껏 반대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하여 사상 처음으로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의 50여 년 외교사에 이례적인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태도를 취한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 핵개발은 중국의 핵심 이익에 직·간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³⁴⁾ 바꾸어 말하면 덩샤오핑이 국익중심의 실용주의 외교노선을 제시하게 되면서 이데올로기를 근간으로 했던 대외정책을 수정하여 무의미한 동서대립을 지양하고자 했다. 또한 덩샤오핑은 중국이 국가 간 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국가의 정책적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자신의 장기적 정책이익에 중심으로 두는 동시에 상대방의 이익, 역사적 원한관계, 사회제도 및 이념적 차이를 뛰어 넘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대소강약(大小強弱)의 수준을 떠

34) 楚樹龍·金威, 『中國外交戰略和政策』(北京: 時事齣版社, 2008), pp. 105~108.

나 상호 존중,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연계되어 있던 '국제적 이익'보다 자국의 이익을 근본 이익으로 간주하겠다는 대외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외교는 탈 이념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그 기본 목표는 국내 경제건설을 위해 양호한 국제환경 및 정책적 기회를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구체적으로 복잡한 국제환경 속에서 영토 및 주권의 안정성을 수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력신장과 국민생활 수준 제고를 위한 국가 발전 목표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세계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국력에 기반을 둔 국제적 책임도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³⁵⁾

2.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개혁 지도부는 탈냉전시대를 기본적으로 평화와 발전 그리고 다극화 경향이 지배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대라고 진단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대외 인식을 바탕으로 독립자주의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강한 국가의 기틀을 마련, 통일 대업 실현, 한반도의 영향력 확보 등 일련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대외정책의 발전과 변화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⁶⁾ 중국의 국력신장에 따라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한반도가 차지하는 정책적 고려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므로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을 유지하고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자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려 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반도에 있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영향력 유

35) 박동훈,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중한관계: 천안함 사건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제2호 2011년(여름) 통권 73호, pp. 123~124.

36) 서진영, 『21세기 중국 외교정책』 (서울: 폴리테이아, 2006), pp. 314~315.

지'라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다.³⁷⁾ 김재철과 문흥호의 논문에 따르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1)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중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 평화로운 주변 환경이 필요하다는 대정책의 기초 아래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바라고 있다.³⁸⁾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한반도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분명하게 강조하는 목표는 바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였다. 특히 1990년대 초반부터 중국의 고위지도자들은 한반도 정책과 관련하여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정책목표로 강조하기 시작했다. 1994년 장쩌민 총서기는 중국을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의 처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는 대국적 견지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없으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³⁹⁾ 이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중국 지도자들의 언급이나 중국의 공식적인 논평은 하나 같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표명한다.⁴⁰⁾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으로 경제발전 자체와 함께 중국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평화로운 주변 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외교정책의 주요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외교정책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작용한다고 본다. 아울러 평화와 안정의 추구를 통해 중국은 한반도의 현 상태를 인정하고 분리된 두 개의 한국정책을 전개하면서 한반도에서 자국의 역할과 국익을 극대화시키려 시도한다. 물론 역사적 시각에서 볼 때 평화와 안정의 추구는 예전의 중국 대한반도 정책에서 변화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는 중국이 냉전시절 추구했던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에서 국익

37) 김재철, 『21세기 중국 외교정책』 (서울: 폴리테이아, 2007), p. 217.

38) 김성철, 『외교환경과 한반도』 (서울: 세종연구소, 2009), p. 106.

39) 人民日報, (1994.3.29.)

40) 문흥호, "중국의 21세기 한반도 정책과 한-중 관계", 『국제정치논총』 1999, pp. 71~86.

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 정책으로 이행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목표로 내세운 이후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제도와 이념에 구애받지 않는 접근을 강조함으로써 남북한과의 관계를 이념이나 전통적 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사안에 따라 처리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점에서 평화와 안정의 추구는 중국에게 있어서 대한반도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중국이 북한체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한반도에서 남·북한에 대해 등거리 정책을 취하도록 작용한다.⁴¹⁾

2)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안정 유지와 함께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주장하는 주요 원칙이다. 중국은 한반도 내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개발, 보유, 발사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는 북한의 핵보유로 인해 동북아에서 핵도미노 현상을 유발하고 중국의 안보 이익에 직간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⁴²⁾ 그러므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대해 비단 북한 핵문제에 국한되는 원칙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비핵화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는 군부를 비롯한 일각에서 만약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 핵을 보유한 4개국과 국경을 접하게 된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⁴³⁾ 1990년대에 중국은 북한 핵 문제의 원칙에 있어서 북한과 미국 쌍방의 협상을 통한 해결을 줄곧 강조해 왔으며 다자주의 방식을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제1차 북한 핵 위기시 중국은 원칙적 성명을 발표하여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일관된 태도를 표명한 것 이외에는 북한 핵 문제의 국제화를 반대하였고 비개입의 방관적 입장을 채택하였다. 동시에 북한 핵 문제는

41) 김재철, 『21세기 중국외교정책』 (서울: 폴리테이아, 2007), pp. 217~219.

42) 김성철, 『외교환경과 한반도』 (서울: 세종연구소, 2009), p. 106.

43) John Pomfret, "A New Direction for Chinese Diplomacy," The Washington Post, August 16, 2003.

평화적 방식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결코 경제적 제재나 군사적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1996년 3월 미국과 한국이 4자 회담을 개최하자고 건의했을 때 중국의 태도는 소극적이었다. 제2차 핵 위기까지 중국은 북한 핵 문제와 동북아시아 지역 다자안보 협력기제 사이에 직접적 연계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⁴⁴⁾

그러나 2002년 10월 북한이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하고 북한 핵 위기가 재차 불거지면서 중국의 태도는 변화를 보였다. 6자회담 개최와 진전에 있어 중국은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미국과 협조를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후진타오를 지도자로 하는 새로운 지도부가 수립된 이후 중국은 2003년 4월 북경에서 3자 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서 2003년 8월 6자회담이 북경에서 개최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06년과 2009년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을 때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해 지역의 안정을 꾀했다. 이렇게 북한 핵 문제를 미국과 협력 하에 해결해 나가는 쌍무적 협력은 다음과 같은 중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첫째, 복잡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양국에만 의지할 수 없는 일이며 국제사회의 참여와 감독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는 것은 안정적인 주변환경을 조성하는 데 유리하며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이는 중국의 안보에 압력을 가하는 새로운 요인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더욱이 일본과 한국이 서로 핵무기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쟁에 들어가게 될 경우 도미노 효과가 일어나게 되면 이로 인해 중국은 핵포위를 당할 수 있는 대단히 불리한 전략적 위치에 놓이게 된다.⁴⁵⁾

3)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남·북한 모두에

44) 김성철, 위의 글, pp. 106~107.

45) 김성철, 『외교환경과 한반도』 (서울: 세종연구소, 2009), pp. 107~108.

영향력을 유지하는 균형외교 정책을 추진해 왔다. 북한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위기상황이 출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은 북한이 자신과 같은 방식의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여 정권의 안정적인 물적 토대를 확보하기를 희망해 왔으며,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 등과 같은 대북압박에 일정한 제동을 걸어 왔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최대 위협요인인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이라는 기제를 활용하고 이를 제도화하려 해 왔다. 둘째, 북한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원조와 경제교역의 확대를 통해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해 왔다. 셋째, 남북한 양측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한반도의 정세안정을 꾀하고 동시에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제고를 추진해 왔다.⁴⁶⁾ 남북한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등거리 실리 외교정책을 전개함으로써 북한과는 과거 혈맹관계라는 특수한 지위에서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로 조정되었고, 한국과의 관계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선린우호관계에서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한 단계 격상되어 중국은 사실상 남북한에 대해 등거리 외교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⁴⁷⁾

한반도 정책에 대한 재조정과 함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던 데서 점차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과거의 동맹관계에서 점차 일반적인 국가 간 관계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북한이 갖는 전략적 가치에 여전히 주목했고, 이에 따라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북한체제를 유지시키고 또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유지하려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시도가 곧 바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북한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중국의 상황과 자신을 활용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46) 元東鬱·김재관, "중국의 대북정책과 동맹의 딜레마: 천안함 사건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12집 1호, pp. 37~38.

47) 서진영, 『21세기 중국 외교정책』 (서울: 폴리테이아, 2006), p. 323.

역으로 이용하려 들면서 양국관계에는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었다.⁴⁸⁾

한·중 수교 이전에 중국과 북한 관계가 사회주의 이념에 더 치중하여 혁명적 동지애를 강조하면서 북·중 동맹관계를 유지하였다면, 한·중 수교를 계기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한 정상적 외교관계로의 전환이 시도되었다. 즉, 이념적, 인적 유대는 약화되고 경제적 자원이나 국제적 유대를 더 강조하는 정책이라 볼 수 있다.⁴⁹⁾ 북한과 사회주의 이념에 치중한 관계를 유지하던 국가이익이 중심이 된 관계를 발전시키든 중국은 북한의 발전과 체제안정이 중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3,4 세대지도자들이 모두 북한에게 중국식의 개혁, 개방 정책의 선택을 수차례에 권고하였다.⁵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도층은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을 수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주체사상을 강조하며 중국을 사회주의 배신자라고 비난하고 그들의 독자적인 길을 고집해왔다. 이러한 선택은 북한 인민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가져왔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중국은 당분간 경제개발 우선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북한도 당분간 그들의 생존전략을 바꿀 생각은 없는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교적 정책적 유대관계 강화가 그런대로 잘 유지되어 왔으나 양국이 대립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⁵¹⁾

중국은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를 '순망치한'의 관계로 비유했는데, 이것은 중국에게 있어서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의의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은 중국의 안정과 사회주의 건설에 절대적인 필요조건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미국을 견제하는 매우 중요한 요충지이며,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와 중국의 대만문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듯이 한

48) 김재철, 『21세기 중국 외교정책』 (서울: 폴리테이아, 2007), p. 244.

49) 陳君峰·王傳劍, 『亞太大國與朝鮮半島』 (北京: 北京大學齣版社, 2004) p. 333.

50) 1982년9월 덩샤오핑은 김일성과 같이 사천성을 방문할 때 공산당지도자들이 반드시 경제 건설에 매진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http://www.cclndx.com> (2012.5.15.) 2003년 8월 6 자회담 개최되기 이전에 후진타오 정부는 "끊임없는 전쟁준비를 중단하고, 허약한 경제를 건설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충고했"다고 한다. 서진영, 『21세기 중국 외교정책』 (서울: 폴리테이아, 2008), p. 364.

51) 광덕환, 김용대, "중국의 대한반도 외교안보 전략 변화," 『중국연구』 제50권, pp. 265~266.

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중국의 통일대업 완성에 중요한 전략지라는 생각인 것이다.⁵²⁾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문흥호⁵³⁾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 기조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본다. 첫째,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둘째,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을 고려한 한반도에서의 총체적 영향력 우위 유지, 셋째, 한국과의 경제교류, 협력 강화 및 정치, 외교적 공감대 확대라고 보고 있다.⁵⁴⁾

이러한 중국의 한반도 정책기조 아래 한·중 관계는 수교를 전후로 변화가 생긴다. 과거 한·중 수교 이전에는 양국 정치관계에서의 가장 큰 쟁점은 북·중 관계였다. 한국은 북·중 관계를 능가하는 한·중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기대, 요구한 반면에 중국은 북·중 관계를 복원하려는 줄다리기가 전개되었다. 중국이 남·북한과 동시에 외교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일종의 등거리 외교를 전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중국은 수교 초기까지도 북한과는 기존의 특수 관계를 유지하고, 한국과는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는 이른바 '북정남경(北政南經)'의 기조를 유지했다.⁵⁵⁾

그런데 이후 중국 외교의 실용주의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이 심화, 구조화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안보영역에서의 협력 필요성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1992년과 1994년 한국의 노태우, 김영삼 두 대통령의 연이은 중국 방문이 있는 이후 성사된 중국 총리의 최초 한국 방문에서 리펑 총리는 남·북한 관계에 있어 자주독립의 원칙을 견지할 것을 강조하면서 남북한에 대한 실리 외교 의지를 암시했다.⁵⁶⁾

중국은 현재 자신이 한반도에서 배타적인 영향력을 누릴 수 있다고 인식하기 보다는 다른 국가들과 영향력을 공유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실제 영향

52) 劉長敏, 『論朝覲問題解決中的國際斡旋與調停』(北京: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7), pp. 231~235.

53) 문흥호,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 인식과 정책 기조", 『중소연구』 통권 99호, 2003, p. 102.

54) 문흥호, 위의 글, p. 102.

55) 전성호·이종화, 『중국의 부상』(서울: 도서출판오름, 2008), p. 231.

56) 리펑 총리의 방한에 대해 외신과 중국 언론들은 중국은 북한의 체면을 살피 주면서, 한국과의 실질적인 관계를 확대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여 중국의 남북한 실리외교 성공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 전성호·이종화, 위의 글, p. 231.

력 행사에 대한 중국의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가령,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중국은 자국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하고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관련하여 자신감을 보인다. 다시 말해 중국은 한반도 정책을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조절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자신감의 근거는 중국이 한반도에서 누리고 있다고 믿는 지위 혹은 자산들이다. 중국은 한반도와 관련하여 중국이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중국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중국의 협조가 없는 미국의 대북봉쇄정책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하여 북한과의 역사적 관계와 북한의 정치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경제원조 또한 자신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근거로 간주한다. 여기에 더해 한국, 북한, 미국 등 모든 관련 국가들과 정상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중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믿고 있다.⁵⁷⁾ 이러한 '종합적' 우세로 인해 중국은 한반도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특수한 지위를 누리며 한반도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⁵⁸⁾

더군다나 요즘은 중국이 한반도와 관련하여 추구하는 영향력에서 경제적 이익이 강조된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이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이라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북한과의 경제관계에서 상업적 성격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 한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자신의 국제적 역할과 지위까지 강화하려 할 것이다.⁵⁹⁾

3. 중국의 대 북한 정책

전통적으로 중국은 대북 정책기조를 중국의 대외정책과 대한반도 정책의 범주에서 설정하였는데 개혁개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대외관계

57) 许纬地, "朝鮮半島核危機的化解與半島走出冷戰," 『世界政治與經濟』(2003, 9).

58) 陈峰君, 王传剑, 『亞太大國與朝鮮半島』(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02). pp. 130~133

59) 金재철, 『중국의 외교전략과 국제질서』(서울, 폴리테이아, 2007), pp. 217~226.

에 있어 이념요인을 상대적으로 덜 중시하는 경향을 띠고 있는 가운데, 주변 정세의 안정유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조정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한반도에 대한 정책목표를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삼고 있다. 박병광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기조가 존재한다. 그 연구에 의한 핵심기조는 다음과 같다.⁶⁰⁾

1) 북한체제의 안정 유지

중국은 북한체제의 붕괴에 대해 자국의 근본적 이익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북한 붕괴에 따른 한반도 불안정이 직접적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발전이라는 중국의 국가목표에 지대한 파급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북한 붕괴로 인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파괴되면 중국은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경제성장에 전념할 수 없게 된다. 만일 북한이 붕괴하면 대량의 북한 난민들은 중국으로 유입되어 동북지역이 불안정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⁶¹⁾ 이외에도 중국은 북한의 체제 혼란과 붕괴에 따른 대규모 난민 유입, 북한 붕괴 전후 상황에 따라 발생 가능한 내전, 우발적, 국제적 대남 무력도발, 국제개입에 의한 무력충돌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부정적 파급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붕괴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⁶²⁾ 또한 중국은 북한을 자국의 안보와 직결된 군사적 완충지대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북한의 경제적 안정과 체제유지를 적극 지원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전략가들은 1950년 한국전쟁에 개입한 것도 완충지역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설명한다. 즉, 중국

60) 박병광, "후진타오시기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북한 핵 인식: 1,2차 핵실험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pp. 55~78.

61) Avery Goldstein, Chapt.5, "Across the Yalu," p. 145.

62) 북한의 붕괴 및 급변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대응에 관해서는 박병광, "북한 급변사태와 중국," 『동아시아 브리프』, 제3권 4호(2008), pp107~112. 박창희, "북한의 급변사태와 중국의 군사개입전망," 『국가전략』, 제16권 1호(2010), pp. 34~59.

은 전통적으로 북한을 일종의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 붕괴를 방지하는데 목표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북한과의 특수한 양국관계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전략적 이해의 차원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는 '완충지역'으로서 북한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⁶³⁾

2) 북한 핵문제 해결

제1차 북한 핵 위기와 제2차 북한 핵 위기 때는 중국이 강조하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입장과 원칙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으나 북한 핵문제를 대응하는 데에 있어 놀랄만한 변화가 있었다. 2002년 제2차 북한 핵 위기가 시작된 시기에 등장한 후진타오 체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접근을 북한 핵 3원칙으로 불리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등 세 가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대북정책의 핵심기조로 삼은 것은 북한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자국의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최우선 목표인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근본적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핵 확산이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안보에도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되었다.⁶⁴⁾

즉, 북한 핵문제를 방지할 경우 역내에서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빌미로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산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립구도를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 핵을 보유하고 있는 4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게 되고 만일 북·중관계가 악화될 경우 북한 핵은 중국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만약 북한 체제의 붕괴가 발생할 경우 핵무기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63) 陈峰君, "21世纪朝鲜半岛对中国的战略意义," 『国际政治研究』 2001年第 4期, pp. 7~9.

64) 북한 핵문제에 관한 중국의 기본 인식과 정책에 관해서는 문흥호,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인식과 정책기조," 『중소연구』, 제27권 3호, 2003, pp99~116; 박병광,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 『동아연구』, 제46집, 2004, pp139~164; 전병곤, "중국의 북한 핵문제 인식과 중북관계의 변화," 『중국연구』, 제35집, 2006을 참조 바람

북한의 핵무기나 핵물질이 중국내 분리주의자와 연계된 세력에 넘어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중국이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는 이유이다.⁶⁵⁾ 때문에 중국은 그 동안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구체적인 정책수행단계에 있어 북한에 대해 설득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인 압박도 병행하는 전술을 채택하여 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러한 비핵화 기조는 북한이 두 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중국은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대북제재에 대한 동참 및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받는 등 국내·외의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대북제재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⁶⁶⁾ 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대북정책의 핵심기조로 삼으면서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북제재나 압박이 북한의 핵정책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극단적 조치를 자극하거나 혹은 북한정권의 붕괴를 야기하게 되어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이다.⁶⁷⁾ 요컨대 북한 핵문제 해결에 관한 중국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시에 북한체제의 붕괴 및 그 이후 중국의 안전까지도 고려한 요인과 연계되는 복잡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북한 체제 붕괴와 그 이후 전개될 한반도상황에 대한 중국의 판단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정책선택에서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문제의 상황전개가 북한 붕괴 등 중국의 국가이익이나 정책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중국은 어떠한 조치도 정책선택에서 배제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65) 문흥호, "후진타오 집권기 중국의 대북한 인식과 정책," 『중소연구』 제33권2호, 2009, p. 28. 전병근,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향: 중국의 입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문집』 2009.12.12. p. 29.

66) 이러한 중국정부의 입장은 제1차 북한 핵실험 직후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006.10.12.)에서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67) 襄克瑜, "中国在朝核问题上的国家利益作用和前瞻性思考," 『国际观察』, 2008年 第5期, pp. 59~61.

중국에게 있어 실질적이고 최우선시 되는 대한반도 이익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보다 한반도의 안정이기 때문이다. 68)

3)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는 중국이 계속 견지해온 대한반도 정책 기본원칙이며 대북정책기조이다. 중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통해 동아시아 역내에서 핵심적 역할을 창출하고자 한다. 특히 제2차 북한 핵 위기 이후, 즉 후진타오 집권 이후 중국은 경제발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을 포함하는 한반도는 중국 영향력 확대의 거점이자 일종의 도약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중국은 2002년 제2차 북한 핵 위기가 발생하자 과거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성사시키는데 주력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⁶⁹⁾ 물론 중국의 이러한 역할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고 6자회담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짐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해결사'로서 중국의 의지와 능력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영향력과 지렛대를 구비하고 있다. 북한은 원유와 식량 등 이른바 전략물자의 절대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대 교역대상국일 뿐 아니라 북한 소비시장에서 유통되는 생활필수품의 80% 이상이 중국산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도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으며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최대한 영향력을 유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이 대북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에 더욱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

68) 박병광, "후진타오시기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북핵 인식: 1,2차 핵실험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pp. 62~64.

69) 중국은 제1차 북한 핵위기 당시에 북한 핵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당시는 첫째, 중국이 천안문사태의 후유증으로 인해 국제적 고립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등 국제문제에 개입하기가 여건이 좋지 않았다. 둘째, 미국이 적극적으로 '다자해결방식'을 고집한 제2차 북한 핵 위기와 달리 제1차 북한 핵 위기 당시에는 한국마저 배제된 북.미 양자해결구도로 진행됨으로써 중국의 개입여지가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핵문제가 악화됨에 따라 대북영향력 상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실제로 북한은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북한 핵문제에 따른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로 인해 중국은 대북영향력의 상실은 물론 북·중관계의 위기를 맞보았으며 심지어 국제사회에서 체면이 구겨지는 수모를 당해야 했다. 따라서 중국은 더 이상 북한을 궁지로 몰아세우는 것이 자국에게 유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재를 수단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행동이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중국은 우선적으로 북한을 자국의 영향권 하에 둬으로써 북한이 중국에 대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의존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최고지도부 교류를 통한 인적유대 강화와 신뢰 회복 및 경제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호연계의 강화 등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예로 작년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역시 북한에 대한 대내·외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중국은 원자바오의 방북을 통해 그 동안 6자 회담을 주도하는 등 국제사회에 각인된 북한 핵 해결사로서 중국의 이미지와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원자바오 방북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6자회담 재개에 관한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지위를 공고히 하였다. 그 동안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고 소리치던 김정일 위원장이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반도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언이며 조건부로 6자회담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점으로 언급함으로써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과시하고 북한 핵문제에 관한 중국의 주도적 지위를 강화하는 성과를 달성했던 것이다.⁷⁰⁾

4) 중국식의 개혁개방 희망 및 유도

그 동안 중국은 수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설득하고 촉구해 왔다. 일례로 후진타오 주석은 2005년 10월 평양 방문에서 만찬

70) 박병광, "후진타오시기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북핵 인식: 1,2차 핵실험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pp. 66~68.

연설을 통해 직접 구체적 수치를 거론해 가면서 개혁개방에 따른 중국의 정치, 경제적 성과를 설명하고 간접적으로 북한의 경제개혁을 촉구하기도 했다.⁷¹⁾ 북한 역시 과거 중국의 개혁개방을 수정주의 내지는 사회주의에 대한 배신으로 치부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이제는 중국의 경제발전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는 그 동안 북한의 개혁 개방과 관련된 중국의 정책이 매우 신중하고 간접적인 권유를 통하여 북한 최고 지도부로 하여금 개혁개방의 불가피성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다만 최근 김정일의 중국 방문시 원자바오 총리가 김 위원장에게 직접적으로 '개혁개방 경험의 전수'를 제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북한의 정책변화를 희망하는 중국의 의지가 제고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은 최고지도부에 대한 개혁개방의 직·간접적인 권유와 더불어 북한과의 무역을 비롯한 경제교류와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이 자연스럽게 외부세계와 접촉하고 국제사회의 변화와 흐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호혜협력, 공동발전'의 원칙과 더불어 '정부인도, 기업참여, 시장운용'이라는 방침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무역 및 투자 등을 통한 경제협력에 힘을 쏟고 있다. 그 결과 제2차 북한 핵 위기 이후에도 북·중간 무역량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08년의 경우 양국 간 교역액은 27억 9천만 달러로서 북한의 대중국 교역의존도는 70%(남북교역 포함시 55%)를 넘고 있다. 국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북·중 경제협력의 확대는 부분적으로나마 북한의 시장경제화를 촉진할 수 있고, 국제정세와 세계의 흐름을 직·간접적으로 교육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⁷²⁾ 아울러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와 관련된 제도화와 법제화를 추구하게 만드는 등 개혁개방을 위해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도록 유

71) 박병광, "원자바오 총리 방북과 북중관계," 『국제문제』 2009년 11월호, pp. 17~25; 이동률, "원자바오 총리 북한 방문과 북중관계," 『정세와 정책』, 2009년 11월호, pp. 13~16 참조

72) 金基正·罗雄厦, "관망과 개입: 1. 제2차 북한 핵 위기에 나타난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 요인 분석", 『中苏研究』 제33권 제1호, 2009, 봄, pp. 13~41.

도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⁷³⁾

그렇다면 중국은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핵문제로 인해 악화일로를 걷고 투자 환경 역시 특별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대북경제교류를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중국이 추구하는 대북정책 전반에 있어서 북한의 붕괴방지 및 영향력 확대 등의 목적으로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경제관계를 심화하는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중국의 이러한 대북정책기조와 접근방식은 장기적으로 통일 이후의 한반도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국이 한반도의 분단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면서 북한의 개혁개방과 경제교류 확대를 추구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만일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에 편입되고 경제개혁을 추진하게 된다면 결국 남북관계 긴장의 완화, 경제협력의 확대, 통일가능성 증대 등으로 연결될 것이며 그것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국이 한반도의 분단 상태를 유지하고 고착화하려는 것과는 정책적 모순이라 할 수 있다.⁷⁴⁾

Ⅲ. 제1차 북한 핵 위기 시 중국의 대응

1. 제1차 북한 핵 위기 발생 과정

북한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군사적 용도의 새로운 핵개발을 시작했는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는 어렵다. 일부에서는 1950년에 발발한 6.25전쟁에서의 미국의 대량파괴 능력과 맥아더 장군의 만주폭격 가능성 언급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불배제 언급 등에서부터 김일성 주석은 핵무기 개발에 대한 충동을 느꼈을 것으로 추측하는 인사들이 있다.⁷⁵⁾ 실제로 북한은 1955년 4월 과학원 제2차 총회에서 원자 및 핵 연구소 창설시 소련과 핵

73) 박병광, "후진타오시기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북핵 인식: 1,2차 핵실험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p. 67.

74) 박병광, 위의 글, pp. 66~68.

75) 장준익, 『북한 핵·미사일 전쟁』, (서울: 서문당, 1999), pp. 114~115.

협정을 체결하여 핵 기술자 30여명을 연수시키기도 하였다.⁷⁶⁾ 이후 냉전기에 북한은 미국과 소련이 대치하는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어 여러 차례 미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았다. 통계에 따르면 1948년 건국 이후 북한은 적어도 미국으로부터 7차례의 원자폭탄 위협을 당했으며 6.25전쟁이 끝난 다음 미국은 1957년에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했다. 1955년에 북한은 과학원 제2차 총회에서 원자 및 핵 물리연구소 설치를 결정했었고, 4년 뒤인 1959년에 북한과 소련이 영변에서 핵 연구소를 만들기로 결정했다.⁷⁷⁾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기간에 소련의 미국에 대한 타협과 양보가 북한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방어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북한은 독자적인 핵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50~60년대는 외국기술과 설비도입을, 1970년대에는 연구기반 구축단계를 거친 후 1980년대에 들어서는 본격적인 원자로 건설과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였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북한의 핵 개발은 많은 진전을 보였으며 핵 기반 시설 건설을 점점 확대해 가고 있었다. 1974년 9월 북한은 IAEA(국제원자력기구)간 연구용 원자로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가입했으며 1980년대에 북한의 원자로 건설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1985년 미국은 북한이 영변에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지목하고 소련을 통하여 북한에 압력을 가했다. 소련은 북한에게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을 촉구하기 위해 북한과 경제, 과학 기술협정을 체결하고 경수로 제공을 약속했다⁷⁸⁾. 북한은 동년 12월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고, 그 이후 국제사회의 핵확산 금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9년 프랑스의 SPOT위성에 의해 영변 핵시설이 촬영되었는데 북한이 영변에 하나의 거대한 단지를

76) 김대규, "북한 핵문제와 중국의 역할," 延邊大學東北亞國際政治研究所主辦, 『東北亞協力時代中國朝鮮半島의互動關係』, 國際學術會議의 발표논문집(2005년.6.25~26. 延吉), p. 117.

77) Joel S. Wit, Daniel B. Poneman and Robert L. Gallucci, *Going Critical: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4)

78) 그 이후에 외부에서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의심이 점점 깊어지고, 소련과 미국, 한국 관계의 개선 등으로 인해 소련은 협약 이행 중지했다.

형성하고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을 세웠으며 핵폭탄 기폭장치의 실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진들은 북한의 핵개발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됐음을 증명했고 이때부터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게 되었고,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확산되었다.⁷⁹⁾ 북한의 이런 핵개발 발전 맥락은 북한이 오래전부터 핵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북한은 핵 개발이 순수하게 에너지 수요나 외부 거래의 수요 때문이 아니고 핵무기를 통해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비대칭적인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⁸⁰⁾

냉전종식 이후 핵 확산문제는 국제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왔고, 특히 미국의 북한 핵 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1990년에 미국 국방부 및 정보국에서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북한이 핵무기 개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신했고, 1990년 말에 미국은 특사를 보내 한국, 일본과 협의를 했는데 삼자는 모두 북한으로 하여금 IAEA의 핵사찰을 받게 하며 제네바합의에 서명을 촉구하는 것이 당면과제라는데 의견을 일치했다. 미국은 1991년 걸프전쟁을 끝낸 이후 한국의 핵무기 철수, 남·북한 비핵화선언체결 지지 등 일련의 '격려'조치를 취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제네바합의를 체결하라고 촉구한 결과 1991년 12월 31일 남북양측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체결하고, 1992년 2월 19일 이 협약이 정식 발효된다. 협약에 따르면 남·북양측이 상호간의 핵사찰을 진행하고 팀 스피리트(Team Spirit) 훈련도 일시적으로 중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의 셋째 조항에 미국이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미끼를 설치하고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를 시도하였다. 그런데 북·미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은 북한이 제네바합의에 서명해야 하는 것인데 1992년 1월 30일 북한이 IAEA와 제네바합의를 체결했고, IAEA는 제네바협약에 의거 남북 상호간 핵사찰을 하는데 동의했다. 제네바합의를 체결하는 과정 중 북·미 양측의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는데 북한은 내·외적인 곤경(困境)을 돌파할 수 있

79) 장준익, 『북한 핵·미사일 전쟁』, (서울: 서문당, 1999), p. 115.

80) 孙茹, 『朝核问题地区合作进程研究』, (北京: 时事出版社, 2009), p. 36.

도록 시간을 끌자는 것이었다. 당시 북한이 처해 있는 국제환경은 한국과의 경쟁에서 열세였고 한국으로부터 흡수통일을 당할 위험,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전환, 중국의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등의 이유에서였다. 또한 북한은 핵문제 해결을 통하여 미국 등으로부터 경제적인 원조를 받고 내·외적인 곤경을 돌파하기를 바램과 동시에 핵 거래가 실현될 수 없을지라도 북한이 핵무기에 의존하여 국가안전 수호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 대상 중 한가지였다. 이리하여 북한은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 6차에 걸쳐 IAEA로부터 임시사찰을 받았고 IAEA는 북한이 신고한 내용과 사찰 결과 간에 중대한 불일치를 발견했다. 이로 인해 IAEA와 북한간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1993년 2월에 북한이 미신고한 시설 2곳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하자, IAEA는 2월 25일 특별사찰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은 특별사찰을 거부한 후 1993년 3월 12일 NPT탈퇴를 발표하고⁸¹⁾ 5월에는 동해에서 노동 1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제1차 북한 핵 위기 국면으로 치달았다.

미국은 특별사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5일 일괄협상안을 마련하게 된다. 북한이 IAEA의 정기사찰을 받아 들이고 남북대화를 재개하며, 미국은 1994년 팀스피리트 훈련 취소, 북·미 3차협상의 재개를 약속하는 내용의 협상안이었다.⁸²⁾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4년 미국 대통령 카터가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과의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동결 의사를 전달받음으로써 핵문제 타결의 실마리가 마련되었고 1994년 10월 북·미 양국은 핵문제에 관해 '미·북 제네바 기본 합의를 체결하였다. 합의서에서 북한은 NPT체제에 계속 남아 있으며 핵안전 협정의 이행 수락을 약속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2003년까지 북한에 1,000MW(e)급 경수로 2기를 제공하고, 경수로 1기 완성 시까지 대체에너지로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

81) NPT는 회원국의 중대한 국가 이익보호를 위해 탈퇴를 통보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82)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9), P. 114.

그 결과 미국과 북한은 1994년 10월 21일 북한 핵문제 해결의 기본구도인 <제네바 기본합의>에 서명하게 되었고 유엔안보리는 의장성명(1994. 11. 4)을 통해 미·북 기본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로써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NPT 탈퇴 선언으로부터 시작된 북한 핵문제는 수많은 난관과 긴장 속에서 마침내 1년 7개월 만에 일단락되었다.

2. 제1차 북한 핵 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제1차 북한 핵 위기 시 중국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는 당시 중국 사회에서 북한 핵 문제에 동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고, 중국 정부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는 성향이 강했다는 점에서 엿볼 수 있다. 즉 북한의 핵 문제는 북한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며, 북한은 미국의 대 북한 압박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방어적 목적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라는 북한식 해명을 지지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⁸³⁾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제1차 북한 핵 위기 시 중국 지도부와 중국 내부의 일반적인 인식은 북한 핵 문제를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안보적 위협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한·중 수교 이후 북·중 관계가 소원해졌지만 여전히 북·중 지도자간 인적인 유대와 신뢰를 지닌 지도부가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시기였으며, 중국 내부의 일반적인 인식 또한 제1차 북한 핵 위기라는 사건을 직접적인 중국에 대한 위협 상황이라기보다는 대미 협상용 카드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였다.⁸⁴⁾

이러한 인식하에서 제1차 북 핵 위기 시 중국의 기본 입장은 "한반도 비

83) 제1차 북한 핵 위기 발생 기간 중 중국의 관영매체인 신화통신사 뉴스를 분석하면 북한 측의 논리와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많았다는 계량 분석 결과가 있다.

84) 金基正·罗雄厦, “관망과 개입: 1. 제2차 북한 핵 위기에 나타난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 요인 분석”, 『中苏研究』 제33권 제1호, 2009, 봄, pp. 13~41.

핵화 지지, 협상을 통한 쟁점 해결"이었는데 이때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NPT탈퇴 성명을 철회하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 1993년 3월 23일 찬치신(钱其琛) 중국 외교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아주 분명하다. 중국은 한반도에 어떤 핵무기 보유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인내심이 있는 협상을 통한 타당한 해결을 촉구한다. 유엔안보리에 제출하면 더욱 복잡하게 될 것이며 국제원자력기구의 범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는 제재 방법을 채택하는 것을 반대한다. NPT에서 조약탈퇴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만 규정했지 조약 탈퇴국가나 조약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국제적으로 선례가 없다"고 했다. 1993년 3월 31일 IAEA 이사회 회의 전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제출하면 북한은 IAEA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할 수도 있다고 미국한테 경고를 했고, 4월 8일 유엔안보리에서 북한 핵문제에 관한 의장성명을 발표한 후 중국 외교부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제출한 것은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며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발표했다.⁸⁵⁾

중국은 IAEA의 사찰을 받으라고 북한을 설득함과 동시에 "압력과 협박(施压与胁迫)"을 반대한다고 미국주재 중국대사 J. Stapleton Roy에게 통보했다. 1993년 5월 11일 유엔안보리에서 통과된 825호 결의안은 북한에게 NPT탈퇴를 다시 재고할 것을 권유했고 조약에 따른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으나 당시 중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중국주재 유엔대표 이조성(李肇星)은 "북한 핵문제는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 미국 그리고 한국 삼자간의 일이고 북한과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타당하게 해결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반대한다. 중국은 유엔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줄곧 반대해 왔고 결의안이 이대로 통과된 것을 더욱 반대한다. 왜냐하면 유엔안보리의 개입이 이 문제를 더욱 복잡화 시킬 것이다"라고 발

85) 孙茹, 『朝核问题地区合作进程研究』(北京: 时事出版社, 2009), pp. 44~45.

표했다. 5월 27일 한국방문 중인 찬치신이 "중국은 한반도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찬성한다. 북한 핵사찰에 대한 문제는 국제원자력 기구와 북한쪽과의 문제다. 중국은 양측이 회담을 통해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북한에게 압력을 가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반대하고 유엔안보리에 제출하는 것도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했다. 중국이 북·미간의 직접 대화를 바라는 것은 "북한과 미국은 '직접 관계자'"라는 인식 때문이었다.⁸⁶⁾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유엔안보리에서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할 때 중국의 지지를 얻어 내려 노력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국경선을 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북한에게 대량 석유와 식품 원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지지 없이 어떤 제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할 때 중국에게 기권표를 던지라고 설득하였으나 중국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정연(张庭延) 중국주재 한국대사는 한국연합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국제관계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인데 왜 북한이 예외이어야 하나면서 중국은 제재를 포함하여 다른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동의하지 못한다"⁸⁷⁾고 말했고 중국은 미국의 협조 요구에 원칙적 입장만 표명하면서 북한에 대한 적극적 영향력 행사를 거부하였으나 UN안보리에서는 북한에 대한 NPT 탈퇴 제고와 핵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⁸⁸⁾ 이후 IAEA이사회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로 규정하고 '경과성 결의안'을 채택하였을 때도 중국은 표결에 기권함으로써 소극적 역할만 수행하였다.⁸⁹⁾

86) 孙茹, 위의 글, pp. 45~46.

87) Michael R. Gordon, "U.S. Will Urge U.N. to Plan Sanctions for North Korea," New York Times, March 20, 1994

88) 박진, 『박진의 북한 핵 리포트』 (서울: 한국경제신문, 2003), PP. 143~146.

89) 金基正·罗雄厦, "관망과 개입: 1,2차 북한 핵 위기에 나타난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 요인 분석," 『中苏研究』 제33권 제1호, 2009 봄, pp. 13~41.

중국은 북한 핵 위기 발생 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주장하며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데에 도움이 안되고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1차 북한 핵 위기 때 중국은 북·미 간 쟁점에 개입하기 싫어하고 '중재자' 역할을 거부했으나 "비공식적"으로 미국의 제의를 북한한테 전달해준다는 역할은 거절하지 않았다. 제1차 북한 핵 위기 때 중국은 비교적으로 수동적이고 될 수 있는 한 개입을 하지 않으려 했고, 한·미·일 삼국은 중국 역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중국은 소극적인 역할만을 하였고 '조정자'나 '중재자'의 위치도 원하지 않았다. 중국의 이런 입장은 세 가지의 원인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째, 당시 중국의 외교정책이 총체적으로 소극적인 정책을 하고 있었고 도광양晦(韬光养晦)의 외교정책을 견지하고 있었다. 둘째, 중·미관계가 총체적으로 긴밀하게 유지되지 않았고, 셋째, 한·중 수교로 인해 북·중 관계가 예전보다 많이 소원해졌기 때문이었다.⁹⁰⁾

북한은 처음부터 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라며 북·미 양자 간의 해결을 주장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가 미국에게 여러 가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의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북한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보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종종 북한에 군사적인 압력을 가했다. 이외에도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어느 정도 미국의 입장을 따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게 북한에 대한 접촉을 늦추도록 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공통이익을 가지고 있기에 북한 핵 위기가 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가 시작된 시기는 냉전 종식의 시기이며 한반도에서 장기간 대치하는 나라 사이에서 다자협력을 시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미국은 북한과 양자 회담을 가지게 되었다.⁹¹⁾

90) 孙茹, 『朝核问题地区合作进程研究』(北京: 时事出版社, 2009), pp. 67~69.

91) 孙茹, 『朝核问题地区合作进程研究』(北京: 时事出版社, 2009), p. 47.

3. 제1차 북한 핵 위기에 대한 중국의 정책 결정 요인

제1차 북한 핵 위기 시 중국은 도광양회의 정책을 견지하고 유소작위의 대상이 주로 국내문제였으므로 주요 정책 목표는 국내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로부터 정치, 경제제재를 받고 있었던 시기로서 중국이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고 중·미관계도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다. 동시에 한·중 수교 이후 북한은 중국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해 북·중관계도 많이 소원해졌던 시기였기 때문에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역할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차 북한 핵 위기 시 중국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는 중국 정부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는 성향이 강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으며, 그 배경에는 당시 중국 사회에서 북한 핵 문제에 동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다. 제1차 북한 핵 위기 시 중국 지도부와 일반대중들은 북한 핵 문제를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안보적 위협으로 보지 않았다. 비록 한·중 수교 이후 북·중 관계가 소원해졌지만 여전히 북·중 지도자간 인적인 유대와 신뢰를 지닌 지도부가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시기였으며, 중국 내부의 일반적인 인식 또한 제1차 북한 핵 위기라는 사건을 직접적인 중국에 대한 위협 상황이라기보다는 대미 협상용 카드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였다.⁹²⁾ 이러한 인식은 제1차 북한 핵 위기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결정했다.

IV. 제2차 북한 핵 위기 시 중국의 대응

1. 제2차 북한 핵 위기 발생 과정

92) 金基正·罗雄厦, “관망과 개입: 1. 제2차 북한 핵 위기에 나타난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 요인 분석”, 『中苏研究』 제33권 제1호, 2009, 봄, pp. 13~41.

1994년 제네바 핵합의를 계기로 반세기에 걸친 북·미 적대관계가 마침내 청산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드디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2000년 미국 대통령선거 개표가 법정시비 끝에 공화당의 조지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⁹³⁾ 이후 제네바합의에 따라 관리되어 오던 북한 핵문제는 2002년 북한이 핵개발을 발표함으로써 새로운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2002년 10월 17일 James Kelly 미국 대통령 특사는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의 고위인사로부터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자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첩보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미국이 북한에게 압력을 가하자 동년 10월 25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의 핵 압력 위협에 대처하고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핵 보유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핵보다 더한 무기를 가질 권리도 있다"⁹⁴⁾고 주장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제1차 북한 핵 위기 시의 상황이 재연되었고⁹⁵⁾ 북한 핵문제가 다시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2002년 11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에 대한 중유지원 중단 결정을 내렸고 미국이 북한에게 정치와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그러자 북한은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핵동결 해제 조치를 단행하고, 12월 31일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감시원을 추방하였으며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핵동결 해제 관련 담화 발표, 북한의 핵동결 해제조치의 개시 그리고 2003년 1월 10일 북한의 NPT탈퇴 선언, 4월 11일 북한 NPT탈퇴 발효 등을 진행했다. 이렇게 숨가쁘게 전개된 일련의 사건들은 제네바 핵합의가 파기되었다는 것을 공식화했고, 북한은 NPT를 가입했다가 탈퇴한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⁹⁶⁾

북·미 양국간 협의의 산물인 제네바 협정이 무산되자, 북한 핵문제는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협상의 틀 속에서 관리되게 되었고 2003년 2월 28일 미

93) 조재길, 『북한 핵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길』, (서울, 도서출판, 2006) P. 290.

94) "重油问题起波澜", 『人民日报』, 2002.11.19;

95) 孙茹, 『朝核问题地区合作进程研究』 (北京: 时事出版社, 2009), p. 151.

96) 孙茹, 위의 글, pp. 151~162.

국이 북한의 5MW(e) 원자로 재가동 사실을 확인한 후 4월 10일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비공개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2003년 4월 18일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을 발표함으로써 제2차 북한 핵 위기는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2. 제2차 북한 핵 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중국의 북한 핵 문제 인식에 관한 박병광의 연구에 따르면 2002년 10월 북한 핵문제가 재연되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6자회담이 성사되었을 때 중국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⁹⁷⁾ 바로, 북한이 체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핵을 개발하는 것이니 체제 안전만 확보해 주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북한 핵문제는 크게 우려할 바가 못 된다는 것과⁹⁸⁾ 핵무기를 보유한 이웃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의 국익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미국이 이를 핑계로 미사일방어 체제를 강화하게 되고 동북아에서 핵도미노 현상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으므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중국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⁹⁹⁾

이처럼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였으나 북한 핵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에 대해서는 미국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 대부분 중국학자들의 견해였다. 즉, 부시 행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9.11테러사건 이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 대상으로 삼았으며 북한체제와 지도자를 무차별 성토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서두르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97) 박병광, "후진타오시기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북핵 인식: 1,2차 핵실험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pp. 70~71.

98) 于美华, "对话是解决朝核问题的最佳途径" 『论坛通讯』 2003年 第1期, pp. 26~28. 이와 같은 시각을 가지는 대표적인 학자들은 朴建一, 虞少华, 于美华 등 있다. 박병광, 위의 글, p. 68.

99) 时殷弘, "美国国家导弹防御计划与中国的对策" 『中国外交』, 2002年 第7期, pp. 47~51. 이와 같은 시각은 이른바 '국제파'로 불리는 중국내의 안보전문가 및 국제정치학자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경향이 강했으며 时殷弘, 沈骥如, 朱锋 등이 대표적이었다.

러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도 어느 정도 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기본인식에 있어서는 북한의 핵개발 의도에 대하여 심정적 이해의 입장을 견지하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 압력만으로는 핵문제의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여겼으며 북한이 처한 입장, 즉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고독감과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한 경계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었다.¹⁰⁰⁾

특히 이렇게 중국은 제2차 북한 핵 위기가 발발될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이 체제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방어적 선택수단으로 핵문제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으로 판단하는 측면이 강했다.¹⁰¹⁾ 중국은 북한의 당면한 경제상황과 낙후성을 감안할 때 재래식 무기 개발을 통한 안보체제의 확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 개발은 그들의 기본적 안전 확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한 것이다. 때문에 중국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안고 있는 안보상의 취약성을 개선해 가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외국 정상들과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면서 예외없이 북한의 '체제보장' 또는 '안보우려 해소'를 강조했다.¹⁰²⁾ 또한 중국은 미국이 북한 핵의 위협을 과대평가하고 있으며 경제 제재나 군사적 조치 또는 정권교체 등에 의한 외부적 압박정책은 적극 배제하였다.¹⁰³⁾

그러나 이후 북한의 점진적인 핵 위기 고조와 벼랑 끝 전술에 대한 우려를 갖게 되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개발이 중국의 안보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다 심각하게 평가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6자회담장에서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5-6개의 핵폭탄을 제조하기에 충분한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 폐연료봉 재처리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증명하고 핵능력을 물리적으로 과시할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해 왔으며 6자회담 자체를 거부하고 '핵무기 보유선언'과 '미사일 발사 실험'등으로 한반도의 불

100) 박병광, 위의 글, pp. 68~69.

101) 张鏈瑰, “送走尼克松, 迎来金正日: 判读朝核问题走向,” 『世界知识』, 2004年 第2期, p. 9.

102) 『人民日报』, 2003年 5月 29日, 2003年 7月 9日

103) 박병광, “후진타오시기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북핵 인식: 1,2차 핵실험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p. 69.

안을 지속적으로 고조시켜 왔다. 이처럼 시간이 갈수록 격해지는 북한의 강경태도는 중국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는데 중국은 북한의 도발적 발언이나 위기고조를 노린 행동들이 중재노력을 기울여온 중국의 체면을 손상시켰을 뿐 아니라 중국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북한 핵 위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¹⁰⁴⁾

북한 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중국의 일부 연변 연구소와 안보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¹⁰⁵⁾ 이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카드를 통해 체제보장을 확보하려는 엄포 차원 또는 협상카드로서의 수단을 넘어 '절대 안보' 차원에서 궁극적 억지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려는 이중전략을 추구할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다. 때문에 중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보완적 수단으로서의 경제적 수단 및 여타의 압박 수단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일부 학자의 경우 북한정권의 붕괴가 장기적으로 중국의 국익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중국 정부 내에서도 제2차 북한 핵 위기가 심화되면서 북한 핵문제 및 북·중 관계에 관한 의견은 과거와 달리 보다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기 시작했다. 가령 외교부와 상무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과도한 중국역할론 또는 중국책임론의 부담을 회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평양과 다소 거리를 두자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당과 군부는 북한과의 전통적 혈맹관계를 강조하는 한편 전략적 측면에서 북한은 여전히 방치할 수 없는 존재라는 주장을 내세웠다.¹⁰⁶⁾

제2차 북한 핵 위기가 시작된 후 중국 내에서는 학계와 정부 일각을 중심으로 이른바 북한에 대한 '전략적 부담론'과 '전략적 자산론'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양한 시각으로 표출되어 왔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104) 박병광, 위의 글, pp. 69~70.

105) 중국사회과학원의 선지루는 북중동맹조약을 폐기해서라도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천진사회과학원의 왕쥔원은 김정일 지도체제와 북한에 대한 공개 비판 내용을 유명학술지에 게재하였다.

106) 박병광, 위의 글, p. 70

논쟁의 한가운데서도 정작 북한의 핵실험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측한 한반도 전문가나 안보전문가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즉,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 시도가 동북아정세에 미치는 영향과 북·중관계의 차원에서 심각한 고려가 있었을 뿐 대부분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핵개발 포기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것이다.¹⁰⁷⁾

2002년 북한이 핵 보유를 인정함으로써 핵 위기가 다시 촉발되었을 때 중국은 제1차 핵 위기 시처럼 이를 북·미 양자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하려 들었다. 2002년 11월 19일 장안(张炎) 대사가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중국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이 일관적이고 분명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주력할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찬성한다. 관계자의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옳은 방법"¹⁰⁸⁾이라고 밝힌 것은 중국의 이러한 태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2003년 1월 북한이 NPT탈퇴를 선언하고 미국이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하면서 상황은 변화했다. 북한 핵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중국은 2003년 초부터 북한 핵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 나서게 되었고 강택민 국가주석은 북한이 NPT탈퇴 선언을 했던 당일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중국은 북한의 NPT탈퇴에 반대하며, 관계당국과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이 때부터 중국이 사상 최초로 우방국인 북한의 외교정책을 공개적으로 반대함과 동시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중국은 과거의 모호성을 버리고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10월 19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APEC회의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과 회담할 때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베이징 6자회담이 북한 핵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6자회담을 계속 추진해야 하며 중국이 계속하여 평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¹⁰⁹⁾라고

107) 박병광, "후진타오시기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북핵 인식: 1,2차 핵실험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pp. 69~70.

108) 中国重申在朝鲜核问题上的一贯原则立场(2002/11/30), <http://www.fmprc.gov.cn/ce/cekor/chn/xwxy/t81409.htm>

109) 刘长敏, 위의 글, P. 236.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3자회담과 6자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의 의장국으로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중재자로 나선 것을 보여준다. 또한, 2003년 2월 12일 IAEA 북한 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제출하는 것을 토의할 때 중국이 찬성표를 던져¹¹⁰⁾ 중국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지키는 태도가 변화하는 등 제1차 북한 핵 위기 때와는 현저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제1차 북한 핵 위기 시 '내정불간섭'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미국과의 정책 협조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은 제2차 북한 핵 위기 시에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적극적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다.¹¹¹⁾ 이것은 총체적으로 중국이 국익을 토대로 북한에 대한 정책을 설정하려 한다는 사실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으며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 변화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국내·외적 정책 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¹¹²⁾

그 후 북한은 연이어 두 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했는데 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분노'와 '실망'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도록 만들었다.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중국은 공개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과 일본 주도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1695호) 통과를 지지했으며 심지어 9월에는 북한의 생명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북 원유 공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였다. 제1차 핵실험 당시에는 주로 외교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표출되었다면 제2차 핵실험 이후에는 중국이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도 노골적인 불만과 반감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특히 제2차 핵실험 직후 중국 내에서는 인터넷 토론방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비판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북한의 핵실험을 중국에 대한 '배반'으로 언급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견

110) 孙茹, 『朝核问题地区合作进程研究』, (北京: 时事出版社, 2009), p. 154.

111) 중국의 북한에 대한 압력행사에 대해서 중국은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만 실제 그렇게 분석될 수 있는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3자회담이 이루어지기 이전 중국이 3일 동안 북한으로 연결되는 송유관을 차단한 사건이나 중북 국경에 중국인민군을 배치한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Andrew Scobell, "China and North Korea: From Comrades-In-Arms to Allies At Arm's Length" SSI Monograph(March 2004), pp. 23~24.

112) 서진영, 『21세기 중국 외교정책』 (서울: 폴리테이아, 2008), P. 333.

되곤 했다.¹¹³⁾

2009년 5월에 실시된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은 다시 북·중 관계를 악화시키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정책을 재검토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중국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제1차 핵실험 당시(1718호)보다 더욱 강화된 유엔 제재결의안(1874호)에 찬성하고 동참하였다. 중국은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것으로 보았으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중국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불식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국 내에서는 기존의 대북 포용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했으며 정부와 학계에서 대북정책 조정에 관한 내부토론이 전개되기도 했다.¹¹⁴⁾

또한 2012년에는 북한의 광명성 위성 발사가 있었는데 핵 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온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에 로켓발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민생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하였다. 북한의 광명성 발사에 대하여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북·미 합의를 파기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북한의 행동을 김정은 정권도 아버지 김정일 정권과 같이 정권 생존을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고, 중국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2012년 4월 17일자 사설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불편한 관계를 피하려고 핵 비확산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당국은 김정은을 존중하지만,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즉, 김정은 정권이 핵폭탄 실험을 지속한다면 북·중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한 것이며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과거와 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 당국이 우회적으로 김정은 정권에 전달한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¹¹⁵⁾

113) 박병광, "후진타오시기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북핵 인식: 1,2차 핵실험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pp. 69~70.

114) 박병광, 위의 글, p. 70.

115) 『조선일보』, "中환구시보, "北핵개발하면 中과 불편해질 것", 2012.04.19 (검색일: 2012.04.19)

이처럼 제2차 북한 핵 위기를 계기로 중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북한을 두둔하던 태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패턴은 과거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일관되게 반대해온 것에 비하면 놀랄만한 변화였다. 북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국은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이나 일본 등 한반도 주변 관계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데 앞장서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자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때로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기도 하고, 강압적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결국 북한이 3자회담과 6자회담에 참석하게끔 유도하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표1>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국의 노력은 제재, 대화, 협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강경 또는 유화 일변도보다는 국익에 근거해 채찍과 당근을 병용하는 다각적 차원의 수단을 활용하여 대북 영향력을 확대해 감으로써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¹¹⁶⁾

<표1>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구 분	2003년	2005~2007년		2008~2010년
대북 제재	단둥(丹東) 송유관 폐쇄(3일간)	UNSC 대북제재 1695호 (2006년 7월 15일) (북한미사일 발사)	UNSC 대북제재 1718호 (2006년 10월 14일) (북한 제1차 핵실험)	UNSC 대북제재 1874호 (2009년 6월 12일) (북한 제2차 핵실험)
6자 회담	제1차 (8.27일~29일)	9.19 공동성명 (2005년, 제4차)	2.13합의 (2007년 제5차)	.
중·북 경제협	10.2억 달러	정부주도(政府主导) 기업참여 (企业参与) 시장동작(市场运作) 상호이익(双赢互利) (2005년), 17억달러(2006년)		27.9억달러 (2008) 인도주의 인프라 건설지원 후진타오 5대 건의 ¹¹⁷⁾ 원자바오 개혁개방 정책추진 ¹¹⁸⁾

116) 박동훈,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중한관계: 천안함 사건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제2호 2011년(여름), 통권73호, PP. 119~147.

117) 2010년5월5일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은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가졌을 때 김위원장에게 고위층상호방문, 전략적 소통강화, 경제협력심화, 인적교류 확대, 문화·교육·체육 등 영역의 교류심화, 국제사무 중 협력을 강화하여 평화와 안정을 수호의 다섯 가지 건의를 했다.

http://www.ce.cn/xwzx/gnsz/szyw/201005/07/t20100507_21371793.shtml(검색일: 2012년 5월24일)

118) 2010년5월3~7일에 김정일 방중 기간 원자바오 총리는 김정일에게 "중국은 계속하여 조

* 자료: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제2호 2011년(여름) 통권 73호 p133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6자회담의 틀에서 평화적, 외교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자국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만약 북한 핵문제가 6자 회담의 틀에서 해결될 수 없다면 중국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을 포기시키려던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다면 동북아 지역에서 안보 딜레마가 형성될 수 있으며 북한의 핵 보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은 물론 일본과 대만까지도 핵무장 경쟁에 뛰어들 것이고,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이 지역의 군사적 안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 올 수 있으며, 대외관계 악화에 따른 북한경제의 하락으로 중국 국경지역에 탈북자가 증가하여 북·중 간 국경 안보는 물론 중국의 사회 불안정을 야기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2.10선언과 같이 북한이 중국의 중재자적 조언을 무시하고 6자회담 추진에 비협조적인 태도에서 더 나아가 도발적인 언동과 버랑 끝 전술을 지속적으로 구사할 경우, 중국은 중·미관계의 악화뿐 아니라 경제 발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악화되어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북·미간 전쟁이 발발한다면 상송국면에 있던 경제발전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원하지 않는 전쟁에 또다시 참전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북한 핵문제를 6자회담의 틀에서 확실히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6자회담에서 최소한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¹¹⁹⁾

3. 제2차 북한 핵 위기에 대한 중국의 정책 결정 요인

1990년대 중반 중국의 국가지위와 외교영향은 큰 진전을 보였다. 이 시기

선의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에 지지할 것이고,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을 기꺼기 조선측에 소개해줄 수 있다. 중국과 조선은 경제와 무역 분야에 협력할 잠재력이 아주 많기 때문에 양측은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하여 양국 국민 민생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119) 박동훈,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중한관계: 천안함 사건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제2호 2011년(여름), 통권73호, P. 150.

중국은 서방국가들로부터의 제재를 타파했고, 홍콩과 마카오를 반환받으며 주요 대국과의 상호관계를 발전시키는 등 세계의 많은 대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안정되고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¹²⁰⁾ 또한 중국의 국제적인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맹목적으로 ‘도광양회’를 강조하는 것은 중국의 대국지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문제 상의 ‘유소작위’에도 많은 제약을 주었고 중국이 국제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더 적극적인 외교정책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도광양회’의 의미가 퇴색되어진 반면 ‘유소작위’의 외교사상은 중국의 외교활동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게 되었다.¹²¹⁾

제2차 북한 핵 위기 때 중국의 국력이 어느 정도 신장되었음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역할을 발휘하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외 정책이 도광양회의 기존 질서 참여 하에 국제문제를 처리할 때 때로는 지역안전 문제에 유소작위의 정책을 펼치기도 하였다. 지난 30여 년간의 개혁개방 성과로 중국은 엄청난 속도의 경제발전과 국력증진을 실현함에 따라 중국은 대외정책에서도 과거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국제사무에서 역할 발휘를 원하게 되었고,¹²²⁾ 이를 위해 중국은 적극적으로 국제문제에 개입을 함과 동시에 많은 국제협력을 이루어 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핵 위기가 끊임없이 확산됨에 따라 중국정부도 점점 북한 핵문제가 중국의 국가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¹²³⁾

제2차 북한 핵 위기 때는 중·미관계가 9.11테러로 인해 이미 많이 개선되었고, 지도층들이 빈번하게 상호 방문하여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다양화되었고 협력 분야도 많이 확대되었으며 상호 신뢰도가 증대되었다. 제2차 북한 핵 위기 시 제1차 북한 핵 위기와 비교해보면 중국은 북한에게 있어 경제, 외교, 국가안보 방면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국가로 더 큰 역

120) <http://wenku.baidu.com/view/43953a6727d3240c8447efe6.html>(검색일: 2012.04.15)

121) http://www.orientalstrategy.com/Shownews.asp?Common_ID=267(검색일: 2012.04.15)

122) 서진영, 『21세기 중국 외교정책』 (서울: 폴리테이아, 2008), pp. 329~331.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1999년부터 제2차 북한 핵 위기 발생 전까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중, 김정일 북한 노동당 총서기 중국주북한 대사관 방문, 2000년 5월부터 2001년 1월까지 김정일의 중국 두 차례 방문, 2001년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방북 등 고위층 상호 방문이 이루어짐으로써 북·중관계가 제1차 북한 핵 위기 시 보다 많이 좋아졌다. 중국이 제1차 북한 핵 위기와는 달리 제2차 북한 핵 위기 시에 적극적인 개입 정책으로 선회하게 된 것은 북한의 핵보유 의도가 명확해지면서 중국의 핵심안보 이익에 심각한 도전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핵심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북한 핵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서게 되었는데 그 요인으로 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핵개발 및 핵보유는 중국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중국이 접적인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은 북한의 핵을 활용하여 중국을 견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핵개발은 동북아에서 핵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력 팽창의 핑계거리가 될 수 있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타이완의 핵무장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북한의 핵개발은 중국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¹²⁴⁾

VI.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제1차 북한 핵 위기와 제2차 북한 핵 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비교함으로써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 변화를 알 수 있었다. 특히 제2차 북한 핵 위기 이후부터 후진타오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남북한과의 관계를 전망해 보았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계속 평화와 발전이 현재 시대의 주요한 흐름(和平

124) 양순창,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대한정치학회보』 17집 2호, 2009. 10, pp. 119~139.

与发展是当今时代的主题)이라는 판단을 기초로 "평화, 자주, 독립"의 외교 정책을 견지해 왔다. 특히, 중국 대외정책에서 주변국가의 안정은 가장 중요시되고 있고, 이것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부터 지속된 중국의 기본노선인 '경제발전'과 직결된다. 이러한 외교정책은 시대의 변화와 상황에 따라 발전과 변화가 있었지만 정책의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 한반도 정책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영향력 유지 등 세 가지 정책 목표로 크게 변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동북아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핵개발이 중국의 국가 이익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당근과 채찍이라는 두 가지 정책을 병행하였다. 다만, 제1차 북한 핵 위기 시 중·북관계가 아직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북한 핵개발을 대미협상카드용으로 판단해서 사태의 발전을 관망하고 있었으나, 제2차 북한 핵 위기가 시작되면서 북한의 핵보유 의도도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핵무기를 보유한 이웃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국의 국가이익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하여 동북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중국에게는 위협으로 작용하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3.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차 북한 핵 위기에서 중국이 보여준 대응 태도는 제1차 북한 핵 위기 때와 전반적으로 다르게 조치했다. 제1차 위기 시 중국은 원칙적 입장만을 표명하고 사태의 발전을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였고,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제재를 반대하여 간접적으로 북한의 편을 들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2차 위기 시 중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였고,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적극적인 중재자로서 북한에 당근과 채찍이라는 두 가지 정책을 병행하여, 때로는 북한에 지원을 약속하고 때로는 압력을 가하였다. 북한이 NPT탈퇴 선언을 한 당일 장쩌민 전 국가주석은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할 때 중국 또한 북한의 NPT탈퇴에 반대하며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같이 노력할 것을 밝혔다. 그리고 중국의 이러한 입장을 외교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표하였다.¹²⁵⁾ 또한 북한의 NPT탈퇴 선언 다음 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NPT 조약의 핵무기 확산방지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정유지 기능을 높이 평가하였고 북한이 이 조약의 보편성을 인정하기를 촉구하였다. 또 2003년 2월 12일 중국은 IAEA의 북한문제에 대한 안보리 회부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짐으로 기권표를 행사했던 제1차 북한 핵 위기 시와는 대비되는 태도를 보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북·미 간의 이견으로 양자회담 형식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중국은 3자회담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하였고 북한이 이를 수용하도록 설득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푸는 역할을 하였다. 3자회담 이후에도 후속회담으로서 6자회담의 성사과정에서도 서틀외교를 통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이상 본 논문의 성과는 북한 핵위기와 관련하여 중국 정책변화의 배경과 대응 과정을 시기적 대내외적 요소들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전제하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계속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북한은 중국의 정책목표를 이용하여 이익의 폭을 최대한 넓히려 할 것이고, 중국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속하면서 핵문제에 대해 설득과 압력을 가하는 정책을 계속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북한의 핵개발이 중국의 최저 양보선을 준수하지 않으면 중국은 현재보다 더 강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중국에 유리하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으나 북한 핵문제는 시간이 오래가면 갈수록 중국과 한국, 미국 등 관련국들에 불리하고 북한에 유리할 것이라는 단순 논리를 떠나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실패와 함께 오히려 중국에게 경제적 정치적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125) 중국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 <http://www.fmprc.gov.cn/chn>(검색일:2012.4.30)

결국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변하지 않는 세가지 원칙인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대화를 통한 평화적 북한핵 문제해결을 위해 21세기 중국의 세계전략이라는 넓은 의미의 정책 추진과 대한반도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은 더욱 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 한국은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점과, 북한에 경제적인 지원을 가장 많이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중국과 한국은 공동협력으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고 북한을 정상적인 나라로 만드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물론 중국의 이익실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한국 자료

- 김계동 등, 『동북아 신질서 경제협력과 지역안보』, 서울, 백산서당, 2004.
- 김기정·라웅하, “관망과 개입 : 1.제2차 북한 핵 위기에 나타난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 요인 분석”, 『中苏研究』 제33권 제1호, 2009 봄.
- 김대규, “북한 핵문제와 중국의 역할”, “延边大学东北亚国际政治研究所主办, 『东北亚协力时代 中国朝鲜半岛的互动关系』, 国际学术会议의 발표논문집 2005년.6.25~26.延吉
- 김병로 등 『북한-중국 간 사회.경제적 연결망의 형성과 구조』, 서울,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8.
- 김성철, 『외교환경과 한반도』, 서울, 세종연구소, 2009.
- 김재철, 『중국의 외교전략과 국제질서』, 서울, 폴리테이아, 2007.
- 문정인, 『중국의 내일을 묻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0.
- 문흥호, “중국의 21세기 한반도 정책과 한-중관계”, 『국제정치논총』, 1999.
- 박동훈,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중한관계 : 천안함 사건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 27권 제2호 2011년(여름) 통권 73호.
- 박진, 『박진의 북한 핵 리포트』, 서울, 한국경제신문, 2003.
- 서진영, 『21세기 중국외교정책』, 서울, 폴리테이아, 2006.
- 송봉선, 『중국을 통해 북한을 본다』, 서울, 도서출판 시대정신, 2011.
- 신상진, “중국의 대 북한 인식 변화 연구 : 북한전문가 심층 면담조사”, 『통일정책연구』, 제17권1호, 2008.
- 연합뉴스, 『북한연감』, 2005.
- 오수열, 『미.중시대와 한반도』, 부산 : 신지서원, 2002원동욱, 김재관, “중국의 대북정책과 동맹의 딜레마: 천안함 사건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12집 1호
-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2009
- 이계란, “후진타오 정부의 대북정책 :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제 4호, 2010
- 이상학, “북한 핵과 한국의 안보”, 『군사논단』, 제36호 (2003년 가을호).
- 이호철, “탈냉전과 중국의 동북아정책 : 세력균형, 민족주의, 상호의존의 결합”, 『국가전략』 5권2호, 1999
- 장준익, 『북한 핵.미사일 전쟁』, 서울, 서문당, 1999
- 전경만, 『북한 핵과 DIM 구상』,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전성흥·이종화, 『중국의 부상 동아시아 및 한중관계에의 함의』,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8
- 전성흥·이종화, 『중국의 부상』,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8
- 정영태, “파키스탄-인도-북한의 핵정책”, 통일연구원, 연구총서(02-12).

조영남,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 서울, 나남출판, 2006.
 조재길, 『북한 핵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길』,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6.
 차수법·왕효, <<등소평과 21세기 중국의 전략>>, 서울, 유스북, 2005.
 한국국제정치학회 중국분과, 『중국현대국제관계』, 서울 도서출판, 2008.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동북아 전략균형』, 서울, 도서출판, 2010.
 한석희,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 대외관계』, 서울, 폴리테이아, 2007,
 현석, 『국제정세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9.

중국 자료

林利民, 《朝核危機管理與中國的外交抉擇》, 《現代國際關係》, 2006年第8期.
 劉長敏, 『論朝鮮核問題解決中的國際斡旋與調停』, 北京,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7
 莊小軍, 吳光祥, 『感悟當代中國外交』,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2009.
 崔志鷹, 『朝鮮半島-多視角, 全方位的掃描剖析』, 上海, 同濟大學出版社, 2009.
 宋長美等, 『中國當代外交史(1949-2009)』, 北京, 中國青年出版社, 2011.
 姜宅九, 《中國參與六方會談: 斡旋角色與前景》, 《當代亞太》, 2007年第2期.
 朱峰, 《中國朝核政策和策略的變化》, 《中國戰略》第3期, 2004年7月20日.
 《六方會談芳菲苑紀事》, 《人民日報》2005年9月26日.
 陳峰君, 王傳劍, 『亞太大國與朝鮮半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4

江澤民: “全面建設小康社會, 開創中國特色社會主義新局面——在中國共產黨第十六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人民日報』, 2002.11.18

楚樹龍, 金威, 『中國外交戰略和政策』, 北京, 時事出版社, 2008
 唐世平, “2010-2015年的中國周邊安全環境”, 『戰略與管理』, 2002年 第5期
 許緯地, “朝鮮半島核危機的化解與半島走出冷戰”, 『世界經濟與政治』 2003年 第9期
 王傳劍, “美國亞太安全戰略中的美韓軍事同盟”, 『現代國際關係』 2002年第5期
 孫茹, 『朝核問題地區合作進程研究』, 北京, 時事出版社, 2009
 樸鍵壹, 『中國對朝鮮半島的研究』, 北京, 民族出版社出版, 2006
 “重油問題起波瀾”, 『人民日報』, 2002.11.19.

中國重申在朝鮮核問題上的壹貫原則立場

(2002/11/30<http://www.fmprc.gov.cn/ce/cekor/chn/xwxx/t81409.htm>

중국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 <http://www.fmprc.gov.cn/chn>(검색일:2012.4.30)

<http://opinion.huanqiu.com/roll/2012-04/2598623.html>

<http://opinion.huanqiu.com/picture/2012-04/2622392.html>

http://world.huanqiu.com/roll/2012-04/2627611_2.html

<http://china.huanqiu.com/roll/2012-04/2588897.html>

<http://bbs.huanqiu.com/thread-1312224-1-1.html>

<http://www.zaobao.com/special/korea/pages4/korea111224.shtml>

<http://world.huanqiu.com/roll/2012-04/2598255.html>

<http://www.zaobao.com/special/korea/pages4/korea111221d.shtml>

<http://www.zaobao.com/special/korea/pages4/korea111227a.shtml>

영문 자료

Cheng Li, China's Leaders: The new Generation.(Lanham: Rowman , Littlefield, 2001)

Joel S. Wit, Daniel B. Poneman and Robert L. Gallucci, Going Critical: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4), P.2

Michael R. Gordon, "U.S. Will Urge U.N. to Plan Sanctions for North Korea," New York Times, March 20, 1994

